

광주시 유명무실 위원회 대대적 손질 나선다

50여개 폐지·통폐합 검토...정비 대상 분류 마치고 조례 개정 돌입 "자질 없는 비전문 위원 유입 막는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잇단 지적

광주시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위해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들이 겹겹이 오려져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본보 2022년 4월 5일자 1면)에 따라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통폐합하기로 했다.

하지만 막대한 이권 등과 연관돼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등 일부 힘 있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비전문 위원의 자질 논란부터 특정업체와 연관된 위원실 등 각종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제도개선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모두 248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회의 수당으로만 2020년 5억8100만원, 지난해 7억5000만원, 올해 상반기까지 3억원 정도 지출됐다.

광주시는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105개, 대통령 훈령 등 기타 규정에 따라 설치시켜야 하는 2개 등 107개를 뺀 141개를 정비 대상으로 검토했다. 이 가운데 최근 1년간 회의 개최 실적 없는 24개는 폐지하거나 유사 위원회와 통합하고, 조례를 개정해 안건이 생기면 심의 의결 후 자동 해

산하는 형태로 비상설화할 예정이다. 또 유사·중복 위원회 8개는 통합하고 존치나 상설 필요성이 부족한 24개도 폐지·협의체 전환·비상설화 등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사실상 활동이 끝난 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회의 실적이 없는 생명나눔 추진위원회는 현행 추진위원회로 통합하는 방식이다. 광주시는 정비 대상 분류를 마치고 위원회 소관실·국별로 조례 개정 등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또 기존 위원회 정비와 함께 설치 남발을 막기 위해 일몰제도 도입한다.

광주시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4년 이내 존속 기간을 설정해 그 이후 해산하는 내용의 각종 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비 절차를 둘러해 내년 초까지는 50개 안팎 위원회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비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정상화하고 슬림화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바로잡기 위해선 위원모집 기준부터 강화하고, 합리성과 전문성, 다양성 등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2021년 6월말 기준 광주시는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여성위원이 50% 미만인 위원회는 135개(57%)에 이른다. 시는 일부 분야에서 여성 전문가 수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지만, 여성 위원이 단 한명도 없는 위원회 수만 15개였다.

타 시도에는 없는 애매한 모집 기준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광주시는 위원 선발 시 엄격한 자격조건에 따른 전문가 선발이 대원칙인데도,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명분으로 '(광주)시장이 인정하는 자'라는 기타 조항을 마련하고 비전문가 또는 특정이력이나 의견을 대변하는 단체 관계자 등을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전문위원은 "다양한 의견수렴은 위원회 상정 전인 사업계획 단계에서 마무리하고, 위원회 회의는 전문가들이 민관에서 제(안)출한 계획 등에 대한 추가 의견을 내고 잘못된 점을 바로 잡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위원회 활동은 전문 영역이라는 점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라는 애매한 항목을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중앙집권 아닌 수평적 협력 필요 자치분권 출발점은 '분권형 개헌'



자치분권으로 여는 미래도시

<7> 국내외 사례로 본 자치분권,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시사점

독일, 재정 자율성 법률로 보장 스위스, 강력한 지방조직 구축 프랑스, 지방정부 간 한목소리 대응

제20대 대통령선거(3월9일)를 6개월여 앞둔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전국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는 자치분권과 관련해 흥미로운 자료를 발표했다.

민주지도자회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치분권 전문가와 시민사회 등이 선정한 자치분권 10대 정책공약 중 3가지를 선택하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는 기초단체장 42명, 광역의원 150명, 기초의원 353명, 일반의원 364명, 준회원 108명 등 총 1017명이 참여했다.

이 조사에서 가장 핵심으로 꼽힌 자치분권 과제는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이었으며,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지방소멸 대응'이 뒤를 이었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헌법1조에서 지방분권형 국가 명시, 기본권으로서 주민 자치권 신설, 재정 자주권 확보 및 자치입법권 등을 명시하는 것이다. 또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강화'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6 대 4 전환을 통한 지방의 자주 재원 확충이 핵심이다.

이번 취재 과정에서 만난 국내외 인사들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재정 자율성'을 이구동성으로 강조했다.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대구시는 지난 3·9 대선 앞두고 여야 후보에게 '지방분권 헌안'을 전달했다.

대구시 지방분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가 만든 개헌안에는 지방분권국가 지향 선언, 주민자치권을 기본권으로 규정, 자치조직권 부여, 자치입법권 및 자치행정권 강화, 자주재정권 보장 등이 담겼다.

독일 베를린에서는 국내 관점으로 보면 다소 생소한 건물과 맞닥뜨렸다. 이들 건물은 수도 베를린에 위치한 주정부의 대사관이다. 주정부 대사관은 연방국과 수도 베를린과의 중요한 정보 전달 및 법적 관련 주요 사항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베를린에 있는 주정부 대사관을 국내와 접촉하면 지자체

의 '서울사무소'쯤으로 여겨진다. 독일은 대사관이라는 명칭으로 주정부, 즉 지방을 우대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사무소이다.

독일은 '지방재정 자율성'이 법률로 보장돼 있다. 법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권한 및 조세 수입 배분을 명시했다.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세금을 교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배분한다고 명시해 동등한 조세 주권을 부여했다. 특히 각 지자체간 산업 차이로 발생하는 수입 차를 연방정부가 조정해주기 때문에 국내 전문가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대상이다.

스위스 행정은 지방자치치를 바탕으로 작은 커뮤니티인 코뮌에서 칸톤, 연방에 이르기까지 3단계로 이뤄진다. 중앙집권화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수직·수평적 협력이 특징이다.

지방분권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프랑스 리옹(Lyon)의 변화는 지방분권형 개헌에서 출발했다. 프랑스의 지방분권형 개혁은 2003년 개헌으로까지 이어졌고, 이를 통해 리옹은 강력한 지방조직을 구축했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강력한 조직을 구축한 리옹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지역을 대표할 경쟁거점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다. 라 콩플뤼앙스(La Confluence)는 리옹주정을 비롯해 우체국과 전기공사와 같은 공공기관, 민간기업, 주택단지 등이 속속 자리를 잡고 있다. 지난 7월, 취재진이 이곳을 찾았을 때 곳곳에서 이색적인 건물을 올리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지방분권을 이끌고 있는 민간 협력 단체인 '위르벤(URBAINE)'을 만났다. 위르벤은 각 지자체, 정부, 의회, 공공기관, 선출직 공무원, 지자체 협회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브누아 코르미에(Benoit Cormier) 위르벤 홍보 담당자는 '위르벤과 같은 지역 간 교류와 소통을 촉진하는 중간 매개체가 없는 한국의 지자체들을 위해 조언해달라'는 공동취재진의 질문에 "지방정부들끼리 한 목소리를 낸다면 중앙정부에 뭔가를 요구할 때도 훨씬 더 힘을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처럼 땅이 넓지 않은 곳에서는 더더욱 지역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선 안 된다. 각 지자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을 것이니까. 프랑스에서도 대도시 지역 지자체와 농촌 지역 지자체의 상생에 상당 부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근무한 인사들이 최근 '지역을 살리는 法-자치분권 6법 사용설명서'를 출간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자치분권형 개헌이 하루속히 이루어져 자치분권의 가치가 헌법정신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분권의 첫 출발점은 자치분권형 개헌이다.

〈끝〉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가 시민들에게 지방분권을 알리기 위해 기획한 뮤지컬 공연. <대구시 제공>

시민 중심, 으뜸 정음

www.jchf.or.kr

제33회 백제가요 정음사 문화제

2022.9.24(토) ~ 9.25(일) / 2일간

정음사공원 및 시내 일원

주최·주관 정음사 (사)정음사문화제제전위원회

9.24(토)	
<p>채수의례 09:00 - 정해마을</p>	<p>여인제의 11:00 - 망부사사우</p>
9.24(토)	9.25(일)
부도여인상 시상 18:00 - 정음사공원 특설무대	축하공연 18:00 - 정음사공원 특설무대
9.25(일)	9.24(토) - 9.25(일)
기획공연-여인의노래 15:00 - 정음사 공원 특설무대	청소년가요제 11:00 - 정음사 공원 특설무대
9.25(일)	9.25(일)
정음사 가요제 18:30 - 정음사공원 특설무대	리브판타지쇼(토·일) 토 19:20 / 일 20:30 - 정음사 공원 특설무대

| 경관조명 | 9.07(수) ~ 11.06(일) - 정음사공원 ~ 정동교

이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마스크 착용 후 관람 바랍니다.

광주시, 청년정책 버전2로 업그레이드

강기정 시장 청년들과 '월요 대화'...부채·구직·자산형성 방안 등 논의

광주시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 청년들의 부채 문제와 구직, 자산형성 등 폭넓은 청년 정책을 구상하기로 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날 오후 7시 시청 다목적홀에서 청년들과 '월요 대화'를 가졌다.

청년정책 네트워크, 청년 기업 트레이닝센터, 청년유니온, 신용회복위원회 등 광주지역 청년 단체와 청년 지원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부채·자산·구직활동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광주시 주요 청년 정책인 청년 13(일+살) 통장, 드림 은행, 청년일 경험 드림 플러스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참석해 참여 경험을 토대로 현

실적인 어려움과 정책으로 생긴 삶의 변화 등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가 추진중인 청년 정책사업 현황과 사례 빅데이터화,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홍보 확대 등에 대한 의견도 모아졌다.

또한, 광주시의 주요 청년 정책인 청년일경험드림+ 사업 등의 양적 확대 등을 위한 업그레이드된 청년정책 실현 필요성에 모두가 공감했다.

강 시장은 "청년 정책 버전 2로 업그레이드를 바라는 만큼 이 자리에서 제안된 청년 부채실태조사, 정책사업 사례 빅 데이터화 작업을 한 마음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원길 기자 cki@kwangju.co.kr